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기존

- 그간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09:00~15:30까지였습니다.



## 변경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09:00~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시행일: 2024년 하반기

-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

- ①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진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③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④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sup>+</sup>」 출범

시행일: 2024년 6월

## 기존

- 그간 '경제배움e'를 통해 경제교육 콘텐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 변경

- 향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sup>+</sup>」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관의 경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더불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기능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기존

-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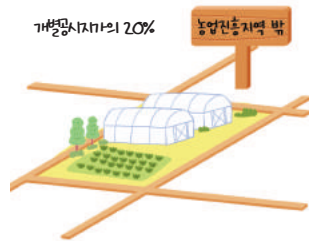
\* 농업진흥지역 안 30%(최대 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30%(최대 5만원/㎡)



## 변경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안 30%(최대 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20%(최대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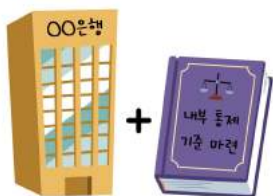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3일

## 기존

-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의무만 부과했습니다.



## 변경

- 기존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에 더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금융위원회의 감독·제재 권한 등 규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직접 요청 가능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2024. 3. 26.)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 01

##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4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적·폐업·육아휴직 (이자면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변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 실적·폐업·육아휴직 + 재난 발생 시 (이자면제) 유예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02

##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46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 기준

-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감치명령 결정까지 평균 2~4년 소요로 신속한 제재조치에 어려움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 변경

- 이행명령→제재조치  
\* 감치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가능



이행명령



제재조치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 기존

- 서울·부산·인천 등 6개 시도



## 변경

- 전국 17개 시도  
+ 24시간 운영체계 및 안전 장비 구축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 0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57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회당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8만원
-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0월 예정)



# 0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58

##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시행일: 2024년 6월(지자체별 상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주돌봄자 부재, 부상,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을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기존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를 선정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변경

- 2024년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신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기존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지원



### 변경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은 기존과 동일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 체불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시행일: 2024년 8월 7일

### 기준

- 지금까지 체불사업주 용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변경

- 하반기부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는 용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 기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68개소)에서 급식·영양관리를 지원해왔습니다.



### 변경

- 2024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로 확대 설치되어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예정(228개소)



##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시행일: 순차 설치 추진으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 기존

- 함께 한걸음센터\* 3개소(서울, 부산, 대전) 설치
- \* 센터는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변경

-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1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7개소로 확대됩니다.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시행일: 2024년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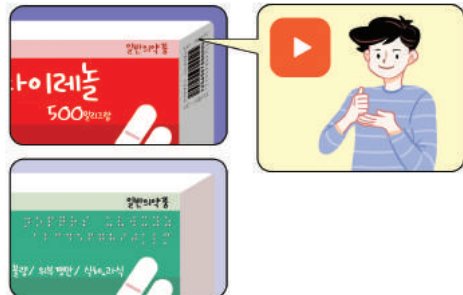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대상품목

안전상비의약품(11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의 총 39개 품목

#### 확인방법

- 표기 대상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제공
- 수어 영상을 통해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 01

외교부

자세한 내용은 P.82

##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비용이 낮아집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15,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	-	33,000원		
		26면	30,000원	-	-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0원	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0원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000원	0원	23,000원	



# 02

외교부

자세한 내용은 P.83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시행일: 2024년 6월 17일

### 기존

-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앱·웹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 변경

- 앞으로는 정부24 앱·웹뿐만 아니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시행일: 2024년 12월(예정)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광역시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7,601㎡, 연면적 17,318㎡(지상 4층) 규모로 12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294

(복성동1가)

(월미도 갑문 매립지)

**주요구성** 해운항만실, 해양교류사실,  
해양문화실, 기획전시실 등

**기대효과**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체험장  
구축, 약 110만 명 방문 예상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 0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95

##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기존

-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은 15,190원이었습니다.

15,190원



### 변경

- 향후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7,600원으로 인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7,600원  
(50% ↓)



# 0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96

##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 대기오염총량제도의 현행 이행력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유연성 제도를 도입 시행합니다.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 총량 이월 가능
- 해당 연도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최대 10% 내에서 차입 허용



-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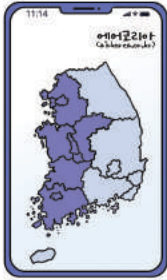
- 지역배출허용총량의 한도내에서,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시 유연하게 할당 가능

##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시행일: 2024년 11월

### 기존

-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권역)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변경

-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하여 전국(19개 권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제공합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시행일(내비게이션 활용): 2024년 7월 4일

-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홍수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알립니다.



##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시행일: 2024년 11월 30일

-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정성 정보 공개 예시(성분별(25개) 등급)

나뭇잎 개수로 표시	
정제수	5개
트리아세틴	4개
프로필렌글리콜	3개
차아염소산나트륨	2개

나뭇잎 개수 의미	
4개	유해 우려 없음
3개	유해 우려 낮음
2개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행일: 2024년 10월

### 기준

- (송출지역 단위) 지진 규모 기준의 광역시·도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반경 (50km 또는 80km) 이내 지역에 송출



### 변경

- (송출지역 단위) 진도 기반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세분화 제공
- (송출범위) 특정 진도(예상 또는 계기진도 II) 이상 지역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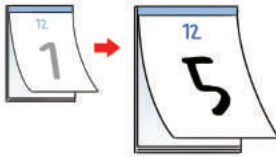


##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 기존

- 기존에는 5일째 날씨 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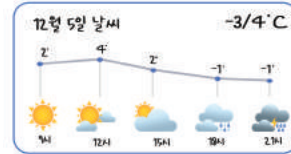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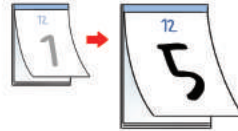


12월 5일 날씨

오전 0% 오후 80% -3/4°C

## 변경

- 향후에는 5일째 날씨정보를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 ※ 오늘~4일째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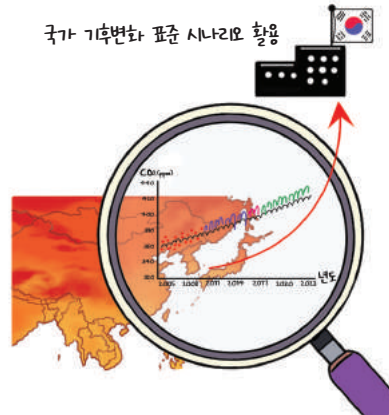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됩니다.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품질관리, 감시·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공동활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시행일: 2024년 12월

### 기존

-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2개(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관측망: 55개소  
서비스: 티맵, 카카오내비



### 변경

-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7개(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관측망: 259개소  
서비스: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 01

##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17일(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 기준

- (적용기한) '24. 8월 일몰 예정이었던 한시법
- (적용대상)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5개)
- (특례범위)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 2개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 (상법 특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 (공정거래법 특례)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지원체계)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운영(대한상의, 서울 중구)

### 변경

- (적용기한) 상시법으로 전환
- (적용대상)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6개)
- (특례범위)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 6개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  
\* (상법 특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 (공정거래법 특례)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지원체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7개 권역 순차 지정)



# 02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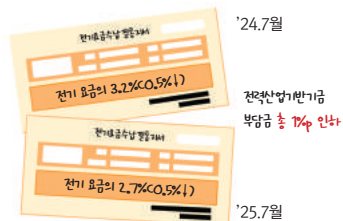
- 지금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었습니다.



### 변경

-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합니다.

※ 1차) 2024년 7월, 0.5%p 인하(3.7% → 3.2%),  
 (2차) 2025년 7월, 0.5%p 추가 인하(3.2%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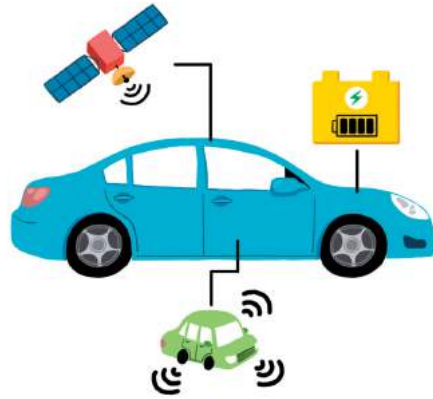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시행일: 2024월 7월 10일

- 미래차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등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시행일: 2024월 7월 10일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만 임대 불가</li> <li>•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산업용지 처분제한 적용</li> <li>•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만 임대 <b>일부 허용</b> *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li> <li>•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b>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산업용지 처분제한 적용 대상 제외</b></li> <li>•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b>일부 허용</b> *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설립 신고 등이 완료된 자산에 한함</li> </ul>

## 매매·임대 제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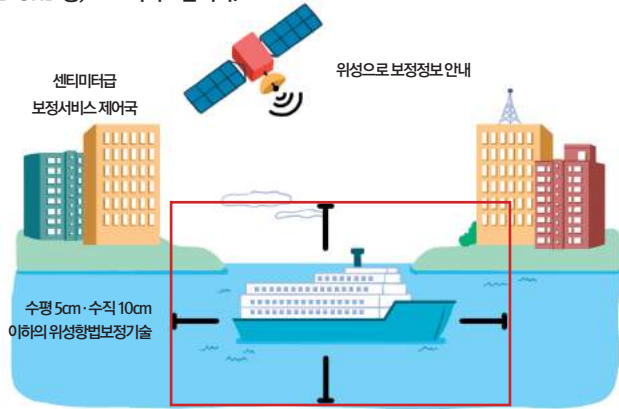


##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시행일: 2024년 12월

- 해양에서 이용 가능한 수평 5cm·수직 10cm 이하의 위성항법보정기술을 개발하여 2024년 12월부터 지상기반 통신망(LTE·DMB·UHD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 위치오차 10m → 5cm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 기존

- 그간 중소기업이 매출액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분류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 변경

-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집니다.

-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3배→5배)
-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처벌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영업비밀 삭제·훼손을 영업비밀 국내유출과 동일하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 기존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권고 가능
  - 시정권고 불이행 시 강제 불가
-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규정 없음
-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있음



### 변경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규정 마련
-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개선
  -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절차 마련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시행일: 공모는 6월, 선정은 11월

-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평가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시행일: 2024년 3월 29일(139개 시·군에서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단개발·소멸에 대응하여 농촌을 국민의 삶·일·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이 도입·추진됩니다.
-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정부가 마련(4월)한 국가 기본방침을 토대로 '25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주요내용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완화, 주거지역 생활SOC확충, 산업기반 활성화 등 추진
- 정부-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국비사업 통합 지원 (5년간 최대 300억원)



##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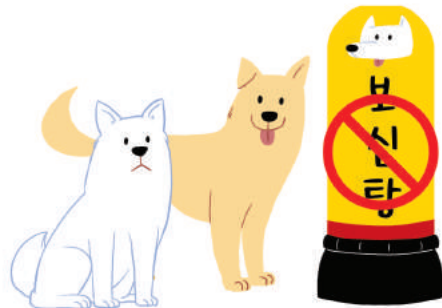
### - 개식용종식법(약칭) 시행 -

시행일: 2024년 8월 7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식용 목적 개 사육·종사·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 시행(3년 유예)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시행일: 2024년 7월 3일

## 기준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8년  
(최초 5년+연장 3년)



## 변경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기간 확대
- 타용도일시사용: 최대 16년  
(최초 7년+연장 3년×3회)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

시행일: 2024년 10월(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 기준

- 지금까지 청년기업 육성 목적 정책펀드는 '영파머스 펀드'가 유일하여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펀드규모 : '23년 152억원)



## 변경

- 청년기업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결성
-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 (펀드규모 : '24년 470억원)



##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시행일: 2024년 10월(예정)

##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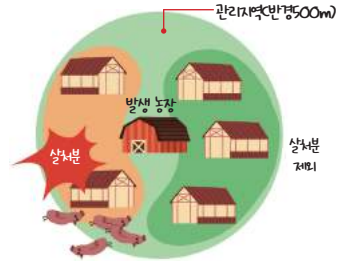
-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 농장의 가금에 대하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시) 500m 내 5개 농장 모두 살처분

## 변경

- 앞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예시) 2개 농장 살처분, 위험도가 낮은 3개 농장 살처분 제외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시행일: 2024년 5월 22일

## 기존

- 지금까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등 121개 품목을 판매해왔습니다.



## 변경

- 향후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수산물 거래도 시작해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합니다.



##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시행일: 2024년 6월

## 기존

- 지금까지 어업인은 어선검사 뒤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를 발부받아 선내 등에 비치했는데, 파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했습니다.



## 변경

- 앞으로는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검사 신청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발급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재발급도 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시행일: 2024년 7월 1일

-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됩니다.

이에 앞서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선정\*과 거래규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4~25) 냉동·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시행일: 2024년 7월

### 기존

- 지금까지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원칙적으로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 변경

- 지속적인 김 수출 증가세에 따른 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합니다.

\* 신규 양식장 개발 계획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이후 7월부터 면허 발급 예정(시·군·구)



##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시행일: 2024년 6월



-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를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합니다.

\*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

기존	변경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퍼센트에 도달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80퍼센트에 도달
-	(추가)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90퍼센트에 도달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100퍼센트에 도달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 100퍼센트에 도달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 기존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선별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변경

-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은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하순경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서울 대방역 인근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솔루션 지원

### 입주 예정 기관

- 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②스마일센터,
- ③피해자 국선변호사, ④진술조력인, ⑤검찰,
- ⑥경찰, ⑦대한법률구조공단, ⑧법률홍덕터,
- ⑨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⑩서울시 스톱킵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⑪고용부 직업상담공무원,
- ⑫서울시 복지공무원, ⑬서울일자리센터,
- 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시행일: 2024년 9월 30일

### 기존

-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 ※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만 가능



### 변경

- 앞으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 기존

- 지금까지는 신분 증명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했습니다.



##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 앞으로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경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드론 비행금지 1,000만원 벌금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2024년 7월 3일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합니다.

- (긴급조치) 경찰관 긴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난명령) 경찰관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앞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 기존

-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CCTV·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영장 발부가 필요했습니다.



### 변경

-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영장 발부 없이 협조요청만으로도 CCTV·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 기존

구분	변경전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화기 비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변경

구분	변경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관부처	소방청
소화기 비치	<b>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b>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